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빨라지는 美 금리인상

또 다시 고개 든 '금리인상 失機論'

〈실기론〉

금리 차 벌어지면 자금이탈 불가피
기준금리 인상, 부담으로 작용할 듯

'금리인상 실기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없어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더 벌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불가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9일(현지시간)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지난 4월 전망)에서 2.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2.7%로 내놨다. 아시아개발은행도 0.1%포인트 낮춘 2.9%로 예상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전망기관으로 평가받는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으면서 한은도 오는 18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총 4차례 경제전망을 한다. 지난 1월과 4월 3.0%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은은 지난 7월 2.9%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전망 시점 이후에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로 미뤄 볼 때 성장과 물가에 관한 기존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향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사실상 정부가 기대하던 3%대 경제성장률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정부와 한은의 전망치인 연 2.9%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91~1.03%씩 성장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총재의 발언으로 볼 때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엔 무리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당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린다. 한은이 당해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없다 보니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금리인상 실기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성장률)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벗어났는지, 부합하는지 평가가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파월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한참 못 미친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립금리는 3.00%로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향후 금리를 1.00% 더 올려야 한다. 미국이 연내 금리 추가인상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0.75%포인트(상단 기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금리 차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정책 안정화는 계속되고 있고 기준금리 상승 기조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금통위 회의를 10월과 11월, 두 차례만 남겨두고 있다.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韓 조선업계 수주량 1위 '굳건'… 선박 시장도 회복세

글로벌 시장 5개월 연속 1위 고수
전세계 발주량 중 한국이 65%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계가 5개월 연속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10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 252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가운데 한국이 65%인 163만CGT를 수주해, 35만CGT(14%)에 그친 중국을 제치고 5개월 연속 1위를 달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실적으로도 한국은 950만CGT(45%)를 기록해 중국 651만CGT(31%), 일본 243만CGT(12%)을 앞섰다.

9월 말 현재 전세계 조선 수주잔량은 8월 말 대비 81만CGT 증가한 7780만CGT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이 2790만CGT(36%), 한국이 2037만CGT(26%), 일본이 1351만CGT(17%) 순이다. 전월 대비 중국이 50만CGT, 일본이 6만CGT 각각 감소한 반면 한국은 133만CGT 늘었다. 한국 수주잔량은 지난 2017년 1월 2073만CGT를 기록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2000만CGT를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선박 발주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지난달 전세계 발주량은 전월(147만CGT)보다 7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1~9월 누계 선박 발주량도 2016년 992만CGT, 2017년 1873만CGT, 올해 2114만CGT로 지속 증가세다.

한편 선박 가격의 상승세도 감지되고 있어 국내 조선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격을 수치화한 신조선주가지수는 지난 8월 129포인트에서 지난달 130포인트로 상승했다. 선종별 선가 추이를 보면 유조선(VLCC)은 150만달러 상승한 9150만달러를 기록했고, 컨테이너선(1만3000~1만4000TEU)과 LNG선은 변동 없이 각각 1억1400만달러와 1억8200만달러를 나타냈다.

/양성운 기자 ysw@

"서울 갭투자·임대용 매수 더 늘었다"

부동산 대책에도 갭투자 2배↑

정부가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오히려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와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2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중 갭투자의 비율이 2017년 10월 21.2%에서 올해 9월 56.1%로 배 이상 늘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시(3억원 이상) 작성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도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해 36.6%까지 내려앉았다.

갭투자를 비롯해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지난 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 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해 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다.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다.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 지난 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허언이 돼 버렸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랐지만 '갭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지역개발사업에 디자인 접목… 고유 경관·개성 살린다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 마련
무주·하동·순창 등 시범 5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을 살리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5곳을 선정해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지방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주차장, 산업단지, 관광단지, 소규모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공간 전략이나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지역의 고유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완성도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총괄디자이너 위촉, 디자인 관리기준 설정,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시범 사업지는 ▲전북 무주군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경남 하동군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충남 예산군 '신(新)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경북 영주시 '공유플랫폼' 조성사업 등 5곳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 일부와 디자인 관리방안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 무주군의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무주를 대표하는 반딧불 시장에 주차장과 연계한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 경남 하동군의 '0380 민다리 문화공원'은 야외공연장, 어린이생태학습장, 컬쳐마루 라이브러리 등 근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로 지역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국토부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내일부터 23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는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엔 해외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을 진행 중인 기관이나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돼 상금이 지급된다. 그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선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 수상작은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 표창 시 가점도 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업별로 축적한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해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